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 중 꽤 많은 부지가 주택이나 상업지구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땅값 대폭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변경 노선이 십수 년의 민원과 2017년 이후 각종 공청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 노선이라는 점이다.(국가 예산 투입 사업은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소유 시설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므로 사업의 추진 주체는 국토부다.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에게 노선 변경 협조를 요청해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만약 이 변경안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무려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이 공적인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김건희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측재에 이용될 뻔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기존 안과 변경 안 중 어떤 노선이 좋은지가 아니라) 기존 노선안을 국토부의 누가 왜 변경했느냐는 것이다.

여권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확산을 차단하려고 온갖 법석을 떨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원희룡은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가짜



뉴스'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가뿐히 '괴담' 취급한다. 그런데 국민의 압도 다수는 알지도 못한 지역 고속도로 문제에서 원희룡이 포기 선언을 한 것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번질까 봐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

백지화

그래서 원희룡의 백지화가 사실상 증거 인멸이자 주민 숙원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일종의 되지기 책략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변경된 노선이 양평군 주민에게 더 좋은 안이라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도 가당찮다. 더 나은 노선이 있다면 절차를 거쳐 바꾸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사실 변경안이 더 나은지도 분명치 않다. 애초 사업 취지는 양평군 내 두물머리(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

점)를 방문하는 관광 차량이나 양평군을 관통하는 차량을 고속도로로 빼내어 군내 교통 정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경안은 서울 강남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곳에 땅 투자를 한 사람들은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다.

여권의 해명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양평군 측의 요청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해명하더니, 이후 반대 정황이 속속 나오자 국토부가 용역을 맡긴 설계사무소의 의견이라고 말을 꾀다.

대통령실의 대응도 미심쩍다. 경찰은 올해 2월 초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7월 14일 소환조사한다. 이 기자들 대부분을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발했다.

그런 윤석열이 자기 가족, 특히 아내의 게이트(권력층 비리 의혹)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해명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최근 부유층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노선과 무관할까.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요동으로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고통받고 최근에도 전세 피해로 인해 죽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때에 윤석열의 처가는 땅 투자를 해 오고 있었다.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인가.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우크라이나 전쟁, 프랑스 소요, 정치·경제 위기 심화와 운동의 전망, 정의당의 위기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 파업을 벌이다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거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비난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부는 2년 가까이 노조에 약속한 인력·공공의료 확충 이행을 외면해 왔다.

더구나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용자인 공공병원들은 정부 명령과 지침에 따라 일반 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코로나 환자 치료에만 전념했다. 코로나 방역이 해제됐지만 의료진과 일반 환자 이탈로 병상가동률은 4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병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공공병원은 무려 8.5퍼센트, 11개 주요 사립대 병원은 4.4퍼센트나 삭감됐다.

정부는 말로만 ‘영웅’이라고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희생한 노동자들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정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병원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노정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완전 정당하다.

정부의 비난과 달리,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인력 부족 속에서도 헌신해 온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을 공감하는 심정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보건의료·노동·시민·정치 단체들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반윤석열 정서가 광범한 것도, 병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정부 파업에 나선 요인이었을 것이다.

지지

7월 13일 낮 수도권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업 노동자 약 2만 명이 상경해 1일 차 파업 집회를 열었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들은 자리를 거의 이동하지 않고 집중해 집회에 참가하며 연신 힘 있게 구호를 외쳤다. 전국에서 많이 모였다는 자부심도 느껴졌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니 파업을 점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의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들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52.8퍼센트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입니다. 극심한 인력 부족, 심각한 구인난! 이것이 진짜 진료 차질이고 의료 공백 아닙니까?”

이어 발언한 지부장들은 현장의 불만을 생생하게 대변했다.

“저는 25년 차 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데 왜 병원 인력은 이렇게 ‘악’ 소리가 나오게 하는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비용이 아닙니다.”(공지현 한양대의료원지부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으로] 현재 우리는 임금 체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사구팽하며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동헌 남원의료원지부장)

노동자들은 파업 2일 차인 14일엔 서울과 세종시, 부산, 광주 등 4개 거점에서 집회를 벌였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자 긴축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조의 협상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며 필요 시 업무복귀명령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래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더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정의당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

7월 19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인식 (노동자연대) 발행인

bit.ly/0719-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